

##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 통일 추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한국식 나이와 해외에서 통용되는 나이 기준이 상이해 혼선이 빚어지자,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이영호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브리핑룸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가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가 및 지

### 한국식 ‘세는 나이’와 국제적 ‘만 나이’, 최대 2살까지 차이 “법적 나이 계산법 통일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인수위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 인식의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도로명 주소처럼 ‘만 나이’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혼선과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인수위는 우선 “내년 초 목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호 간사는 “지금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문제는 국민 의식이야. 아직도 만나이가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인식이 덜 되어있다”고 인정했다. 또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 없고 야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돼 있는 신속항원검사소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철거되고 있다.

## 신속항원검사 재편 첫날 ‘어수선’

### 검사 중단 첫날, 병·의원 ‘장사진’ “아프면 보건소부터 가야하는 줄” “아직 이르다” “검사비 전가” 불만

“괜한 헛걸음만 했네요.” “감염 확산세를 감안하면 이르지 않아요.”

11일 오전 9시 30분 광주 남구의 한 ‘호흡기 전달클리닉’ 지정 병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가 전면 중단되면서 병원을 찾는 검사자는 평소보다 10~20% 늘었다.

병원 입구 앞까지 긴 줄이 늘어섰다. 기다림에 지쳐 보채는 아이부터 잔 기침을 하는 학생, 70대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대 서구 한 병원 임시 접수 창구에도 검사자 10여 명이 줄을 섰다. 음압 격리실에서 검사자를 맞은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PCR검사·신속항원검사 여부를 판단했다. 확산세가 잦아든 지난주부터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100명 꼴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아침부터 헛걸음을 한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다. 유전자증폭(PCR)검사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헛걸음을 해야 했다.

가까운 보건소를 들렀다 온 김모(75)씨는 “코로나19로 아프면 보건소부터 가야 하는 줄 알았다. 누가 나서서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 밖에 없다”며 머쓱한 표정을 지

었다. 공무원 이모(59)씨는 “전날 받은 국민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항원검사 체계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며 “오하러 곧바로 치료제 처방도 받을 수 있어 장점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별진료소와 달리 병·의원에서는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었다.

최모(24·여)씨는 “금액이 적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검사자 개인의 비용 부담은 클 것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가 후퇴,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공 의료 영역에서 기본 검사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비용의 30%를 검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보험 수가 차이에 따라 병원은 9000원, 의원은 5000원 안팎이다. 검사 필요성이 역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더 커진다.

민간 병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의 부담이 커진 데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한 전담병원 관계자는 “진단검사 체계의 중심이 민간 전환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지역 확진자가 1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다소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대기 인원이 많고 발열 검사 등 관련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고 했다.

박남진기자

## 장성군 봉암로 삼거리 차선 ‘재도색’

### 郡“재발 방지·민원서비스 강화”…일부 주민 ‘늑장 행정’ 지적도



11일 전남 장성군 봉암로 삼거리 일부 구간에서 차선들이 다시 도색되는 등 정비가 마쳐진 모습.

【속보】 장성군 봉암로 삼거리 일부 도로가 엉성한 도로정비로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호남신문 홈페이지 4월 7일자)과 관련해, 관계 당국인 장성군과 전남도가 해당 구역 차선에 대한 재도색을 지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1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장성군 봉암로 삼거리 일원에서 차선 재도색 작업이 진행됐다. 이는 전날 본 보의 ‘봉암로 삼거리 일부 도로가 차선들이 중구난방으로

구획돼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장성군과 전남도 등 관계 당국이 해당 일대의 안정성을 검토한 뒤 내려진 조치다.

관계 당국은 이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민 대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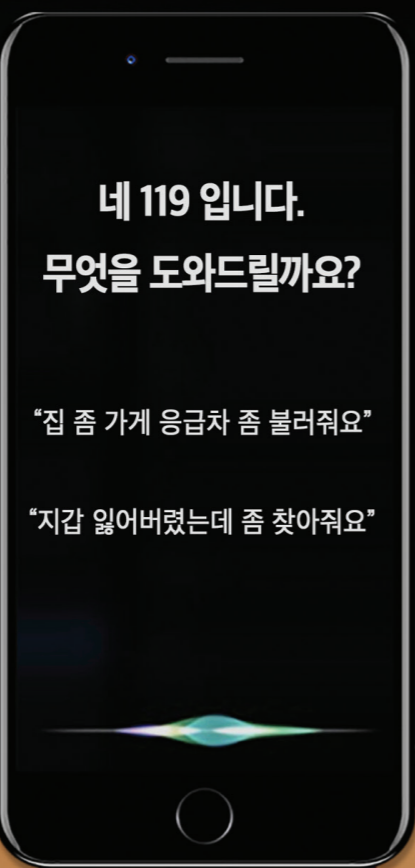
주민 A씨는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차선이 그려져 다행이다”면서도 “그동안 수차례 불편민원제기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더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